

경제정의

약자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공동체 경제

박 득 훈

2022 기독교대선행동 대표

우리는 2022년 대선이 “생명·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향한 선택이길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독교대선행동을 출범시켰다.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려면 경제 영역에선 무엇보다도 경제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경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나라가 총량적 경제성장에 성공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다 해도 그건 가진 자들만의 기쁨이요 행복일 뿐이다.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계와는 별 관련이 없다. 이는 “정의(찌다카)의 열매는 평화”라고 명토 박아 선언한 이사야의 말씀을(사 32:19) 가슴에 새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명명백백한 진실이다.

하나님나라가 요청하는 경제

성경이 쓰인 시대는 대부분 농경과 목축이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다. 그런 배경에서 주어진 경제에 관한 하나님의 다양한 교훈을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거기서 시대적 제약 조건 하에서 하나님나라에 최대한 근접한 경제의 전형(패러다임)과 거기에 담긴 주요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당대의 지정학적·역사

적·문화적 특수성이라는 껍질을 그대로 놔둔 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깊이 성찰하고 음미할 때 가능해진다.

실천적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찾아진 전형이나 원리를 도구로 삼아 자본주의 경제를 가장 근원적이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보다 정의로운 경제체제를 고안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나라의 윤리적 관점에 가장 근접하며, 과학적 역량이 가장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학적 분석도구 역시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짧은 글에서 그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여 여기서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나라가 요청하는 경제, 즉 “약자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공동체 경제”가 뜻하는 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에 최대한 근접하고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약자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경제

약자라 함은 기존의 지배적인 정치·경제 구조 하에서 부당하게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가난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겪는 사람들을 뜻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정치경제 체제 하에선 이런 약자가 언제나 다수로 존재해 왔고,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구약시대의 약자는 고아, 과부,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여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선 실업자, 알바생·일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후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은퇴자, 장애인, 여성, 상대적으로 형편이 낮기 하지만 자본에 비해선 여전히 을일 수밖에 없는 모든 임금 노동자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창 18:19)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의(미쉬파트)’와 정의(쎄다카)를 행하라고 명하셨다(암 5:24). 종종 쌍둥이처럼 함께 등장하는 공의와 정의는 둘 다 관념적이고 분석적인 추상명사가 아니라 행동을 뜻하는 행위명사다. 공의와 정의가 촉구하는 행동은 문맥상 언제나 명백하다. 억압과 착취로 인해 억울한 가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 권리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그들이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존엄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의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전형(패러다임)이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 하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행동이다. 이러한 공의와 정의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

통 받는 것을 똑똑히 보시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처지를 마음 깊이 생각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출 2:23-25; 3:7-10).

그런 점에서 정의에 대한 이런 저런 추상적인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이라는 오래된 원칙에서부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경우만 허용된다.’(차등의 원칙)는 점을 강조하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이르기까지 정치철학적 정의론은 추상적이다. 추상적 정의론의 문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기존 사회의 지배동맹세력에 의해 은밀하게 왜곡·오용되기 쉽다는 데 있다. 그런 난점을 피해가는 최선의 길은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실천에 몸을 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공의와 정의가 요청하는 바다. 그런 실천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의론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해갈 때, 비로소 하나님나라에 가장 근접한 정의론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동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을 깊이 참조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분명한 건 하나님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악자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둘러싼 논쟁 역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는 공동체를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가 서로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연합체로 이해한다. 에밀 브루너는 공동체를 “자유 안에서의 교제, 교제 안에서의 자유”라고 간결하게 잘 묘사했다.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스스로를 “우리”라 표현하신 삼위 일체의 하나님, 개인 및 가족의 책임성과 사회적 연대가 조화를 이루는 희년제도, 성령의 부으심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 사회의 모습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동체 경제란 바로 이런 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목표로 삼는 경제체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맨 밑바닥엔 ‘사회란 건 없다, 오직 개인과 가족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놓여 있다. 공공의 이익은 각 개인이 치열하게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때, 비로소 극대화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가운데 세워졌던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이상을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부패한 관료주의 및 전체주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쓰러진 패배를 맛보았다. 공동체 경제는 바로 이 두 체제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개인주의와 전

체주의를 배격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경제를 추구한다. 그 목표는 신중하면서도 용기 있는 실험들, 그리고 그에 동반되기 마련인 시행착오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달성되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정책 방향

약자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공동체 경제를 일구어갈 수 있는 정도(正道)는 자본주의 체제를 과감히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해가는 것일 테다. 이는 주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소수 자본가에게서 사회 전체로 전환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무정부적 상품생산과 시장교환을 통한 수요공급의 사후적 균형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나가야 한다. 이는 과잉생산으로 말미암아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불황과 공황 그에 따르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다. 대신 민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계획에 근거한 생산과 그에 따른 교환 및 분배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는 주요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 각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과 지금은 고도의 기술발전으로 더욱 가능해진 경제관련 정보수집과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으로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남북이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 형편에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제안이다. 자본동맹세력의 저항은 극렬할 것이며,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도 요원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의 최선은 주요 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현 자본주의 체제를 최대한 그리고 과감히 고쳐 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래전 시작된 무수한 논쟁과 제안 그리고 다양한 국가적 혹은 국지적 실험이 여전히 진행형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 어떤 것이 '약자를 해방시키는 공동체 경제'에 가장 근접한 것인가를 가려내는 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기에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을 절망적이거나 냉소적인 눈길로 바라보지 않는다. 치열하지만 열려 있는 논쟁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잠정적으로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빌려 왔다. 하여 경제 영역을 사회적경제, 생태경제, 시장경제, 공공경제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안하되 각 영역의 정책방향이 '약자를 해방시키는 정

의로운 공동체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단 생태경제는 2020 생태문명 분과와의 공조와 역할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제외되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정책방향'이라고 명명한 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나 역량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중앙정부와 시장의 직접적 지배로부터 상대적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경제를 뜻한다. 즉 시장경제 내의 경제활동이긴 하지만, 이윤획득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부차적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정부와 시장이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는 인간의 기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에 일정하게 수익을 환원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경제의 중심 주체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주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를 조화시키는 데 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사업분야 진출 지원: 현재는 IT산업, 인공지능산업, 자율주행차 산업 등 혁신사업분야를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소셜벤처 등이 보다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들에게 금융 지원, 기술 및 경영지원, 마케팅 지원을 안내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확대 지원: 현재는 노인, 장애인, 환자 돌봄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나 사적 이윤추구 활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사회적경제기업이 이 분야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사회주택 활성화: 시민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토지임대부형 혹은 리모델링형 등)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 **사회연대금융의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뿐 아니라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사회목적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사회연대금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올해 7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창립한 사회연대신탁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 **사회책임조달의 확대:** 공공기관 즉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이를 대학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혁신:**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지원조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 예산 확대:** 위에 열거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책이 실현되려면 사회적경제 예산확대가 필수적이다.
- **법 및 제도 개선과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제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마을단위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지방분권 및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이는 지자체와 마을자치조직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즉 지자체와 각종 마을단위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그린사회 전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교육, 혁신분야 등에 마을단위 사회적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시장경제

시장경제 영역이 '약자를 해방시키는 공동체 경제'에 기여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면 약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패자 부활이 불가능해진다.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알려진 헌법 119 조 2항은 ‘국가는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경제주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가가 시장경제 영역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재벌총수 및 기업주의 절대적 지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노동자 대표, 하청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 지역 대표 등의 경영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한 기업이 존재하고 발전하는 데는 이들의 기여가 절대적인 데다가, 기업의 결정이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한 처사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확보: 대기업의 자기 계열회사 일감몰아주기 그리고 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한 중소기업 착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골목상권 및 노점상 보호법 제정: 골목 상인이나 노점 상인은 단순히 무능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다. 불공정한 경쟁과 운이 작동하는 냉혹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누군가는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이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경제적 파국으로 내몰리지 않고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세하게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교육정책 개혁: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주의를 근본적으로 척결하지 않고는 어떤 교육정책, 입시정책을 내 놓아도 백방이 무효함은 이미 증명되어 왔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은 학벌주의를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일단 국공립대학을 통합해 7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고 소위 사립명문대학교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학벌과 무관한 채용이 획기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부모의 경제형편에 따른 교육기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공정한 노동정책: 가장 근본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확립과 실현이 필요하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협상력을 높여 가기 위해선 노동3권의 온전한 적용분야를 확대해 나가며(공무원 노조, 교사노조 등), 산별노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노

동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부당한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며, 손쉬운 위협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즉 35시간 기준에 5시간 추가로 단축해야 하며, 최저시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며,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 고용 및 특소고용노동자 기본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

- 금융시장의 공정성 제고: 현재의 금융시장은 부자에겐 후하고 가난한 사람에겐 냉혹하다. 독점적 금융자본의 거대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이를 척결해 나가기 위해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해야 하며, 독립적 금융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 서민금융의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 토지 및 주택 정책: 한국사회에서 토지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다. 이 상태를 놔두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한다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가장 근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 112조는 애매모호하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권이 제안했다가 무산된 개헌안 128조 2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해 1989년 토지공개념 3법 중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은 부활시키고, 개발이익환수법을 시행하는 것도 토지불평등을 해소해가는 한 길일 수 있다. 그보다 더 급진적인 길은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주택청을 신설해 기존의 LH와 농어촌공사를 인수해 토지정책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토지보유세를 활용해 토지임대부주택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농지투기차단을 위해 절대농지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철거금지법을 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공공경제

공공경제의 역할은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계를 개선·심화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다. 유의할 점은 중앙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

예컨대 관료주의의 방지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복지체계를 최대한 지방분권화 하는 것이다. 즉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그 결과 우리로선 다음의 1안과 2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열린 입장을 갖기로 했다.

1안: 기본소득론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체제를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2안: 부분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농어민)을 도입하고 기존복지체제를 통합 및 유지함으로써 현행 사회보장제도 수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 이렇게 열린 입장을 취한 것은 현재로선 우리 사회에서 두 안이 서로 긴장하며 건강하게 경쟁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 최선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1안: 기존 복지체제의 심화]

- 조세정의 확립: 충분한 복지재정 마련을 위해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세무조사 강화, 세제 강화 예컨대 대기업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원상회복, 누진세·상속세·종합소득세·법인세·토지세 강화가 필요하다.
- 사회서비스 심화: 우선 무상보육의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과 중앙정부로 나뉘어 있어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행 예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보육료지원 확대보다는 공공성을 띤 보육기관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이윤추구를 제1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민간시설을 축소시켜나가야 한다. 아울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해 나감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 사회보험 심화: 4대 보험 가입 대상을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해나가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여부보다 소득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항목의 축소, 1년간 의료비 상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방식의 수가제로의 변경을 통해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공적부조의 심화: 공적부조도 사회보험같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공적부조에 필요한 자산심사를 아예 폐지하거나, 그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수급자에게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공적부조가 노동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득 구간별로 추가소득이 더 증감하도록 탄력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저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편적 기초노령연금을 전면 실시할 필요가 있다.

[2인]

- 기본소득은 노동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공유부에 대한 일정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낙인효과 없이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으며,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하지만 현 정세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형편을 감안해 - 위에서 언급했듯이 - 부분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부터 도입하고 기존복지체제를 통합 및 유지함으로써 현행 사회보장제도 수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자연적 공유부 과세인 토지보유세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론

각 개인의 경우 아픈 곳에 마음이 집중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나라의 초점도 사회적 약자에게 맞춰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들을 해방시키는 정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나라도 불완전한 인간 사회에 부리를 내리며 자라가야하기에 늘 실현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시면서 전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으시고 보다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그 분이 우리의 참 희망인 이유다. 그 분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힘차게 정진함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